

전북도·삼성, 청년 지원 협력 본격화

도내 청년 자립 위한 3자 MOU 체결... 재정·공간·교육 연계 지원으로 청년단체 정착·자립기반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성물산·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와 삼성물산 송규중 사장, 삼성전자 정효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청년희망터'와 '희망디딤돌' 사업을 전북도의 청년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 민·관 협업의 새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31일 김관영 도지사와 삼성물산 송규중 사장, 삼성전자 정효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기업의 ESG 경영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결합, △재정 지원 △공간 제공 △역량 교육 △협업 프로그램 등 4가지 축을 통해 전북 청년단체의 정착 기반 강화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경우 시너지가 기대된다.

도는 청년단체의 초기 아이디어를 다듬는 '조지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업화',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화', 일자리 창출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삼성의 이번 사업 또한 전북의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단계별 지원 체계에 함께 참여하며, 향후 사업 간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 자립을 지원해 왔다.

현재 15세 이상 보호아동 706명(지난해 12월 기준) 및 자립준비청년 361명(지난해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생활실 22실·체험실 4실 등을 운영 중이다. 개소 4후회 지나면서 도배·장판 교체 등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따라 관련 개보수 비용을 전북도와 삼성이 분담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삼성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청년단체들이 지역 성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립할 실질적 토양을 일구어주겠다"고 말했다.

송규중 삼성물산 사장은 "전북도와 청년희망터 사업 협력을 통해 전북 청년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효명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역균형과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만큼, 삼성은 전북도와 협력해서 '희망디딤돌' 사업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 '햇빛소득마을' 사업 본격가동

지자체·공공기관·사회연대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출범

주민 설명회·협동조합 조직화 등 사업 준비 단계 집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도청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발대식이 열렸으며, 사업 초기 준비부터 인허가 계통 연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를 비롯해 전북 지방환경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8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다만 주민 주도 사업 특성상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발굴 등 초기 단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지원단 출범 이전부터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도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장지원단은 주민 설명회와 상담,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부지 발굴, 인허가 절차 지원 등 사업 준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지 확보를 위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해 유류부지 발굴을 추진하고,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와 ESS 설치요청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1만호 기자

전국 최초 다자녀 패밀리카 지원... 전북, 현대차·기아와 맞손

지역상생형 협력 모델 구축...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최대 600만원 혜택·저출생 대응 정책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 가동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도 행정부지사와 박구열 현대차 전북지역본부장, 진인호 기아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함께 이루는 정책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기아와 손잡고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를 위한 패밀리카 구입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본격 가동한다.

총 사업비는 10억원(도 40%·시군 60%)으로, 올해 2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등 지역 수에 따라 물량이 나뉜다. 신청은 4월 1일 각 시·군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 마감되며, 5월 11일까지 심사와 선정 발표가 마무리된다. 이후 차량 구매 계약·출고·보조금 신청·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수령 후에는 2년간 도내 거주 유지와 차량 운행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도는 이 협약을 발판으로 민관 협력 방식의 저출생 대응 모델을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법적 토대를 미리 마련해 왔다"며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자녀가구의 안전한 이동권까지 이루려는 복합 정책인 만큼,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어린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구에 넓은 실내 공간의 대형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현실적 이동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가족 단위의 이동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단순 차량 구입 지원을 넘어선다.

협약 차량 구매 시 100만원이 즉시 할인되고, 도와 시군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총 최대 600만원의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다.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청이나 현대차·기아 지점·대리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1면에 이어... 소득하위 70% 1인당 10~60만원... 2026년도 정부 추경안

이번 재원에는 유가 급등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및 의회예산 부족 보전 소요도 함께 담겼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끌어올리기로 했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8%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오른다. 유가 부담을 자동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전환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신규 고유가 피해지원금 4358,000억원이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이중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3,259만명, 차상위·한부모 38만명, 기초수급자 285만명으로 제시됐다. 지급 방식은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

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50만원이 지급되고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6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를 먼저 1차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할 뒤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할 방침이다.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에너지 복지도 별도로 편성됐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LPG를 쓰는 20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7,000원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총 20만원가량 상향되는 셈이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고

8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거대 양당 금품 의혹 반박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8일부터 각 관할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입후보안내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신고·신청 방법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전북도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금품 수수 의혹은 회의를 넘어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적 병폐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특정 인물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 양당 중심 정치 체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지역 정치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도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도, 성평등 정책 실행력 제고 위한 합동 워크숍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양성평등업무 추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전북성평등연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 기획부터 집행

까지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향 △전북성평등연평가센터 컨설턴트 위촉 △정부합동평가 대응 방안 △성인지 의무교육 이행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방안 등이 다뤄졌다. /1만호 기자

민주 도당 선관위, 군산시장 예비경선 중단

내일부터 이틀간 재실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군산시장 후보자 예비경선을 전격 중단하고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위원장 박영자)는 지난달 31일 진행 중이던 군산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도당 실무자의 착오로 일부 후보자의 경력 표기

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경선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인을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경선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공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삼아 후보자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예비경선을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만호 기자